

#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앞두고 찬반 홍보전

### 시민단체, 플래카드 걸고 반대 호소... "찬성 홍보 편파적" 주장 도시철도공사, 필요성·안전성 담긴 전단 돌리며 찬성 여론 조성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여부를 두고 공론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찬성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각각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전에 나섰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을 애초 시민단체와 합의한 대로 '속의형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5일 제4차 회의를 갖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선정, 속의조사 세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된다.

현재 추진 중인 2호선 저상도 방식을 전제로 찬성으로 나오면 곧바로 건설을 추진하게 되고, 반대로 결론이 나면 2호선 건설은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선임되는 300~350명의 시민참여단이 정보제공과 토론, 1박 2일 합숙 토론 등을 거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오는 11월 10일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2호선 건설에 반대해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 시내 여러 곳에 '지하철 2호선 반대, 가난한 광주살림의 해법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 주말에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소규모 리플릿 형태의 홍보물을 나눠주며 지하철 건설 반대를 호소했다.

홍보물에서 이들은 '전철 영향권 인구의 과다 선정', '소규모 꼬마 전철', '과도한 연간 운영적자' 등 2호선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는 2호선 건설을 홍보하는 전단을 뿌리며 찬성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 전단에서는 도시철도의 필요성, 편리한 운행 환경, 버스 환산 시 1024대 대체 효과, 사고 위험 없는 안전성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시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하철 2호선 추진 속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여차하면 직접 결정하겠다고 읊러내고 있다"며 "지하철 공론화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이 자신들은 대대적인 반대 홍보전을 벌이면서도 정작 찬성 홍보 전단 배포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론도 있다.

건설을 찬성하는 시민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한 시민단체는 없다. 건설을 찬성하는 쪽의 의사를 대변할 창구가 없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도시철도공사가 찬성 홍보를 벌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민모임 측에서도 플래카드와 전단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내용으로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서면서 찬성 측 홍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역 뉴딜사업·송정역 관문역사 속도 낸다

### 광주시-코레일 업무협약

이용섭 광주시장과 오영식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광주송정역 관문역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시에서 문범수 도시재생국장, 김준영 교통건설국장 등이, 코레일 측에서 김진수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 정용구 광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돼 광주송정역의 역사 확충 필요성 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코레일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필요한 자산 사용에 적극 협조하고, 광주시는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철도시설 이전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제반절차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와 코레일은 광주역 차당기 지 부지 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광주역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구상 용역'을 공동 추진한다.

시는 과거 호남 최대 관문이었던 광주역이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산업 및 청년창업의 요람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광주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 징역 1년 2개월 징역 2년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김 구청장은 광주·전남 27개 단체장 가운데 지난달 17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운행 함평군수에 이어 두번째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 출마를 미리 계획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조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불법 경선·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 구청장이 공단 직원들에게 경선을 위한 당원 모집을 조건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봤다.

김 구청장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 자 한 당(黨) 활동일 뿐"이라며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다.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구속을 피함에 따라 당분간 광산구청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김 구청장이 항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 내에 2심과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만약 2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구속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현재 추가로 단체장 1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 지방공무원 848명 지난해 범죄 저질러 불명예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와 교육 공무원 가운데 800명이 넘는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찰에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와 교육청(교사 제외) 소속 공무원은 모두 848명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전체 공무원 정원 총수(7766명)의 1.6%인 125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은 지자체 소속(2만 1727명) 공직자 중 범죄로 처벌받는 공무원이 2.0%인 43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1773명 중 3.9%인 69명이 범죄자가 됐다. 전남도교육청도 4914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218명이 범죄 불명예를 안았다. /박진표 기자 lucky@



시민단체, 육일승천기 군함 반대 포문을 하고 있다. 1일 오후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국제관함식에 육일승천기를 달 일본군함이 참석하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육일승천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5년간 34건 적발

광주 16건·전남 18건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지난 5년간 34건의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가 적발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년)간 광주시는 16건,

전남도는 18건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광주시에서는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가 15건이었고, 3억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1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남도에서는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11건, 3억 이상 7건 각각 적발됐다.

허위신고로 징계의결이 요청된 사례는 광주·전남에서 한 건도 없었다. 그 밖의 광주·전남 기관 중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이 2014년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허위신고 사례로 경고 및 시정조치 1건이 내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5년간 2748건이 공직자 재산을 허위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7년은 649건으로 5년 전인

2013년 대비 51.3% 증가했다. 재산 허위신고 적발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5년 동안 368건의 재산 허위신고가 적발됐고, 다음으로 국방부 255건, 교육부 1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며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공무원행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라도 천년의 혼 담은 '아트&버스킹' 펼친다

### 3일 순천 시작 여수·광주서

전라도 천년의 혼이 담긴 '아트&버스킹' 공연이 광주·전남 곳곳에서 펼쳐진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새롭게 단장한 '아트&버스킹' 이벤트가 3일 순천 낙안읍성을 시작으로 강진·해남·여수·광주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린다.

새단장한 '아트&버스킹' 이벤트는 '전라도 천년의 혼(魂)'을 테마로 천년 귀신, 도깨비 등을 등장시켜 관객과 함께 하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3일 개천절을 맞아 순천 낙안읍성에서 열리는 '아트&버스킹'은 '과거 천년 전(前)'으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캐릭터 퍼포먼스와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순천에 이어 13일에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열리는 강진 생태공원에서 열린다. 20일에는 해남 두륜산, 27일에는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광주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 등과 함께 매주 일요일 4개 지역구별로 각각 진행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